

# 한빛원전 절반 폐쇄...영광군 이젠 뭘 먹고 사나

##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보니

정부가 '제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탈(脫) 원전 로드맵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한빛원전 1·2·3호기가 오는 2034년까지 가동을 멈춘다. 한빛원전 1호기는 오는 2025년, 2호기는 2026년 9월, 3호기는 오는 2034년 9월 전력공급 설비에서 제외된다.

지역 환경단체 등에서는 지난해 여름, 한빛원전 6기의 원자로 중 3개의 가동이 멈춘 상태였음에도 여름철 전력수급에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던 점을 들어 잦은 사고·정비 불량 등으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한빛원전의 조기 폐쇄(廢爐)를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34년까지 6기 중 3기 폐쇄=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제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체 전력 생산에서 원자력 비중을 낮추고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높이는 게 골자로, 원자력발전의 경우 오는 2034년까지 17기로 줄이겠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국가 에너지정책의 기본 틀로 전기사업법에 따라 2년마다 수립하는 행정계획이다. 9차 전력계획은 2020년부터 2034년 까지

## 1·2·3호기 2034년까지 폐로 확정...원전세 감소 등 지역경제 타격

남은 3기 문제점 노출에 지역민 불안 속 영광군 근본대책 마련 분주

의 전력수급 전망과 전력설비 계획 등이 담겨있다.

한빛원전 1호기는 오는 2025년, 2호기는 이듬해인 2026년, 3호기는 2034년에 폐로의 수순을 밟게 되는데,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2017~2031년)에 견줘 한빛 3호기 폐쇄 계획이 새롭게 추가됐다. 노후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탈원전 정책 기조가 담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역민들 사이에서는 한빛원전 6기 중 절반인 4·5·6호기가 멈춰선 상태라는 점을 감안하면 원전 6기 모두 불안한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온다.

한빛원전 4호기의 경우 지난 2017년 5월 18일 가동을 멈춘 뒤 벌써 1000일을 훌쩍 넘긴 상태다. 5호기의 경우에는 지난해 4월 실시한 계획예방정비에서 부실한 정비 실태가 드러나면서 운전이 중단됐다. 한빛원전 안팎에서는 이 때문에 한빛원전 6호기도 1년 6개월마다 진행되는 계획예방정비 기간 중 어떤 문제점이 드러날 지 촉각을 곤두세우

는 분위기다.

6기의 원자로 중 3개는 노후화돼 폐로 일정이 잡혀있고 나머지 3기는 운영 과정의 문제점이 노출되면서 멈춰선 만큼 불안감도 커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전력 수급에 지장이 없다면 안정성 문제가 제기된 한빛원전의 조기 폐쇄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환경단체들 주장도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전남에 확대=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증설도 눈에 띈다. 정부는 제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저탄소 경제·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가속화해 태양광·풍력 설비를 증대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전남의 경우 40MW를 초과하는 태양광·풍력 발전 사업 허가도 가장 많이 받은 상태다. 전국에서 40MW를 초과하는 태양광 발전사업허가가 난 지역은 모두 28곳에 이르는데 절반인 14곳이 전남에 위치하고 있다.

40MW를 초과한 풍력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전국 107곳 중 전남에서만 30곳이다. 강원(35곳)을 제외하면 전국에서 가장 많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이제 뭘 먹고 사나=영광 지역민들을 중심으로 노후 원전에 대한 불안감이 더해 폐로로 인한 지역경제 우려도 흘러나온다.

영광지역의 경우 한빛원전에 대한 의존도가 막대하다. 한빛원전이 납부한 지방세 누적액만 3445억(2014~2020년)에 달하고 원자력발전지역 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 및 원전주변지역 사업지원금(2017년 기준)도 영광군 세입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

한빛원전은 지난 2016년에만 628억원에 달하던 원전세가 지난해는 412억원에 그쳤다. 공극 발생 등의 문제로 한빛 3·4호기 가동이 오랫동안 멈추면서 매달 원전세도 예년에 비해 줄어든 것이다. 영광군이 한빛원전 폐로 대책 마련에 나선 이유다.

영광군은 지난해 5월 한빛원전 1·2호기 폐로 대비 기본계획수립 용역 중간보고회를 연 데 이어 조만간 2차 보고회를 열고 구체적인 대응 계획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횡령금액 모두 갚아서

보조금 3억 빼돌린 복지관 직원 감형

수익원의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회복지관 직원이 횡령한 금액을 모두 갚았다는 점을 들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3부(부장판사 장용기)는 업무상횡령과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광주 광산구 모 종합사회복지관 복지사 A(38)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1년)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보조금 2억7000여만원을 횡령,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3개월 동안 수십여차례에 걸쳐 복지관에 지급된 정부 보조금 등 3억 2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1심에서 횡령한 2억8000여만원을 변제한 데 이어 항소심에서 나머지 피해금액을 모두 갚은 점을 반영하고 해당 복지관에서 14년간 성실하게 근무한 점 등을 감안, 1심보다 형량을 줄여 선고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피해자들과 합의해서

무면허 운전 사망사고 미성년 감형

면허도 없이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 2명이 숨지는 사망 사고를 낸 미성년 운전자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면서 감형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3부(부장판사 장용기)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1)군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2년 6개월, 단기 1년 6개월)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 단기 1년을 선고했다.

수형생활 태도 등을 감안해 짧게는 징역 1년, 최장 1년 6개월을 살게하는 것으로,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조기에 출소할 수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심과 항소심에서 피해자 유족들 및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에다, A군이 차량에 동승했던 피해자들 관유로 운전을 하게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형이 무거워서 부담하다'는 A군의 항소가 이유있다"고 판단했다.

A군은 지난해 2월 4일, 광주 서구 농성동 농성지하차도 입구로 진입하기 위해 무리하게 운전석 핸들을 틀면서 중앙선을 침범, 마주오던 피해차량과 충돌해 피해 차량 운전자와 A군 차량 조수석에 탔던 동승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 차량 뒷자리에 탔던 다른 동승자도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병원발 코로나 확산에 시민들 불안 확산자 이송...병원 인근 발길 '뚝'

## 12명 확진 광주 서구 중앙병원 가보니

'코로나19'가 광주지역 병원 곳곳으로 번져나감에 따라 지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14일 광주 보건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까지만 광주 서구 '중앙병원'에서 12명의 확진자가 쏟아졌다.

이날 오후 2시께 보건당국은 구급차량을 보내 확진자들을 이송하기 시작했다. 당국은 확진자들을 3 그룹으로 나눠 구급차량에 태운 뒤 격리병동으로 옮겼다.

보건당국의 조치가 끝난 뒤부터 병원 주변의 인적이 뜸해졌다. 중앙병원(4·6층) 건물 1층 약국에는 손님을 찾기 힘들었다.

약국관계자는 "평소에도 손님이 많은 편은 아니

지만, 오늘처럼 손님이 없는 경우는 처음"이라고 말했다.

인근 식당들도 환자 보호자와 병원 관계자들에 이어 일반 손님들도 찾지 않고 있다. 한 식당 주인은 "점심시간이 지나도록 고작 두 테이블만 받았다"며 "먹고 살려고 문을 열었지만 지속된다면 문을 닫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지역민들은 감염수칙을 철저히 지켜온 병원에서 서조자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병원 진료를 꺼리는 가 하면, 병원 방문에 대한 두려움을 내비치고 있다.

중앙병원 인근에 사는 김모(45)씨는 "병원에서 코로나가 감염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솔직히 병원 가기도 무섭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14일 오후 광주 서구 중앙병원에서 확진된 입원환자가 치료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전날 이 병원에 서 근무하던 간호조무사를 비롯해 환자 등 10여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김민석 기자 mskim@

## '의뢰인 성폭력' 국선변호사 구속

검찰 지정 국선 변호사가 성폭력 피해자(의뢰인)를 변호하는 과정에서 성폭력을 가한 혐의(광주일보 2020년 9월 4일 6면)로 구속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류종명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국선전담 변호사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류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31일 광주 동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성폭력 사건 피해자인 의뢰인에게 부적절

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피해자 진술과 성폭력 혐의를 입증할 증거 자료 4건을 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유전자 정보를 확인해 비교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그러나 "기본적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관련 증거가 수집된 점에 비해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경찰은 이후 검찰로 사건을 넘겼고 검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추행 혐의 안병호 전 함평군수

항소심도 실형 선고...법정구속

안병호(73) 전 함평군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광주고법 형사 1부는 14일 상습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전 군수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안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은 실형을 선고하면서 고령점 등을 감안,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도주 우려를 들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안 전 군수는 군수 재직 기간인 2010년 10월부터 2015년 9월까지 군청 여직원이나 지인인 여성 등 5명을 11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별행 내용과 당시 상황, 피해자들과의 관계를 볼 때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조합원님과 함께한

# 광주문화신탁 창립 27주년

## 광주대표 서민금융 협동조합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아파트담보대출**

아파트 감정시세

**최고 70~80%**

추가신용대출 상담가능

**담보대출**

시세 **80%까지** 법인 **100억** 개인 **50억** 가능

각종 부동산담보(아파트, 주택, 상가, 빌딩, 대지, 전·답, 임야 등) 및 신축자금(시설자금) 등

**상생협력대출금**

\*\*\* 사회적 경제기업

대출금리 **2.28%**

대출대상 (예비)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정부보증 햇살론대출**

근로자 최대 **1,500만원**  
(근로자 금액한도 기준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지원)

자영업자 최대 **2,000만원**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연선로 91번길 20-4

☎ 1644-7990

문흥본점 266-4150

양산지점 573-4150

운암지점 528-4150

매곡지점 572-4150

첨단지점 576-4150

운암산지점 513-4150

동광주지점 264-4150

듣듯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평생어부바 신탁**

